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789
----------	------

발의년월일 : 2016. 12. 18.

발 의 자 : 안산시의회의원일동

□ 주문사항

- 붙임 ‘결의안’ 과 같음.

□ 제안이유

- 올해는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되는 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세입예산규모는 중앙정부가 79%, 지방정부가 21%의 비율이며, 세출 예산은 지방정부가 60%, 중앙정부가 40%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후진적 현실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명분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사업 중단을 권고하였고, 이는 지방 자치는 커녕 ‘복지자치’ 죽이기에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행정자치부는 독자적 복지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를 줄이기로 했고, 법제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 규정을 중앙정부의 ‘동의’ 로 해석하였으며, 이로써 지역에서 싹 틔운 맞춤형 복지사업이 일순간에 중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우리 시의 경우 정비 대상사업이 총 8건으로, 장애아 통합보육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한부모 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 등 기존 수혜를 받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후퇴를 가져올 것이고, 열악한 계층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임.

-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번 국민총리실 산하 사회 보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76만 안산시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전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

☐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정비사업 현황 : 붙임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문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 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여 지방정부에 권고하였고, 본 권고안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의 삭감을 예고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2016년도부터 우리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의 출산 장려 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 공공 보건사업, 어르신 생활 보장 정책 등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로써 생활에 타격을 받는 국민만 646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정비대상사업이 8건으로 2016년도부터 장애아 통합보육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수수당,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한부모 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 다문화관련,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복지사업에 있어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고유의 복지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이번 행위는 헌법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대다수 복지 관련법과 정면 충돌합니다.

지역의 ‘복지자치’는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각지대를 일정 수준 감싸는 역할을 해왔고, 이는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시민과 함께 발굴해 법과 제도가 외면한 어려운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품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책이 전국에 퍼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이 시대의 요구이며, 지역에서 일군 맞춤형 복지의 싹을 키울 노력은 커녕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당연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이번 국민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76만 안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철회를 촉구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번 권고안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과 더 이상 복지 아닌 복지정책으로 고통받는 시민, 더 나아가 국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이번 권고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부세 삭감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2015. 12. 2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